

새정부 내각 인선서도 광주·전남 배제

■ 맞을린 통합민주당 ⑥ 공천혁명만이 살길

‘대한민국 광주전남島’... 고립 현실화

‘실용’ 명분 지역배려 외면 안될 말 ‘사회 통합’ 헛구호 비난 불보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수석 비서관 구성이 영남 편향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초대 각료 인선에서 호남인맥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광주·전남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과거 영남 정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한바 있는 광주·전남 지역 일각에서는 벌써 ‘영남 공화국’, ‘겨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호남 인맥 배제 이유=대통령직 인수위 및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참여정부 등에서 호남인사를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게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본사가 지난해 4월20

일 창사 55주년을 맞아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완전 배치돼 단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정부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1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27%인 111명에 그친 반면 영남 출신은 전체의 38%인 158명으로 집계됐다.

또 8대 정부 부처 핵심요직에서는 영남 인맥(12명)이 호남인맥(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특히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4월15일 현재)까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영남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천1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전체의 37%대인 747명으로 집계된 반면

호남 출신은 전체의 19.1%인 386명(광주·전남 244명, 12%)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당선인이 각료 인선 및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 등에서 지역 배려 의지가 있었다면 기용할 수 있는 호남의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당장 장관급으로 기용할 호남지역 인사만 해도 1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명분으로 지역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실 돼버린 호남 고립=이처럼 실용으로 포장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 통행식 인선으로 호남의 고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만간 이뤄질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인선에서도 호남 인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청와대에 파견될 정부 부처 파견 고위 공무원들도 영남 인맥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청와대 인선 및 정부 각료 인

■ 새정부 장관 유력후보(13개 부처)

부처	성명	나이·출신지	학력	경력
기획재정부	강만수	63·경남 함진	서울대 법대	재정경제원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이문대	63·경남 진해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제15대 총장
외교부	유영환	62·서울	서울대 행정학과	주일 대사
법무부	김경환	64·경북 안동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방부	이상희	63·강원 원주	육군사관학교	합동참모본부 의장
행정안전부	원세훈	57·경북 영주	서울대 법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
문화부	유인준	57·서울	중앙대 연극학과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농수산식품부	정운천	54·전북 고창	고려대 농림경제학과	한국농업CEO 연합회 회장
지식경제부	이윤호	60·대전	연세대 정외과	전경련 상근부회장
보건복지여성부	김성이	62·신의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뉴리트전국연합 부대표
환경부	박은경	62·경기 수원	이대 영어영문학과	대한 YWCA 회장
노동부	이영희	66·경북 경산	서울대 행정학과	인하대 교수
국토해양부	정종환	60·충남 청양	고려대 정외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민 이사장

선에서 영남 인맥이 주류를 형성함에 따라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에서도 호남 인맥이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같은 영남 편향적 정부 인적 구도로 인해 광주·전남 등 호남 현안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호남과 정부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호남 인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갈등 조정하나=이명박 정

부의 인적 구성이 영남 편향 및 호남 배제로 가닥 지어지면서 이명박 당선에 내세웠던 사회 통합은 헛구호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지역 배려 인사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내면서 안락한 지역 감정의 골이 다시 깊게 패일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살릴 마지막 기회 ‘함량미달’ 철저 배제를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공천의 기준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전남을 뒷받침으로 하는 통합민주당이 출범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공천장이 당선증’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광주·전남에서는 14일 현재 전·현직 의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인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와 교수, 의사, 기업인, 법조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 100명이 통합민주당의 공천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광주의 경우 7개 선거구에 50명이 예비

개혁 공천 불발맨 수도권표 결집 안돼

‘정치적 고립’에 지역 발전마저 더딜 듯

후보로 등록해 7.1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색이 강한 전남에서도 13개 선거구에 50명이 몰려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가 나오든 이길 가능성이 큰 선거라면, 제대로 된 인물이 후보로 지명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한다’는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적인 공천’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양성평등위 장관급 격상’ 카드 통할까

한나라·인수위, 조직개편안 절충안 마련 민주 “3개 부처 백번 생각해도 양보 못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가칭)과 한나라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협상이 14일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타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가 실무선을 통해 물밑 조율을 계속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진전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이날 밤까지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되 결렬될 경우 15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지막 협

상 카드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을 존치하고 2명의 특임장관 설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해양부와 여성부, 농진청은 백번 생각해도 양보할 수 없는 사수해야 할 부처라는 생각을 모았다”면서 “그래서 이 세 곳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승리를 이유로 무조건적 양보를 강요하고, 발목 잡기라

는 비판 때문에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한 맹렬한 성토와 규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김효석 원내대표 등 협상단계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 한나라당의 협상 카드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해양부 존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경우 예정대로 보건복지부에 통합합치키로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또 농진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연구



대통합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를 재정보다 계속 지원키로 하고 농림분야의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농진청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해양부 존치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토해양부”라며 해양부 존치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TF 팀장은 “물리적 법정시한은 이미 경과했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전문절차를 7~8일까지 단축할 수 있어 14일 밤 늦게까지라도 대화를 해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어떻게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일은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광주·전남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 2008.03.01(토) 오후 9시

장: 호남대학교학생기숙사 및 협상산 일대(광주-삼천포)

참가비용: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장애인 2,000원

문의: 02-260-3111 (광주) / 02-260-3112 (전남)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